

# 브라질 '삼바' 처럼... 서울 하면 떠오르는 축제는?

(리우)

## 서울시 관광브랜드 육성

### 자치구·민간단체 자원 발굴 장소·파급효과·축제성 고려 계절별 대표 축제 브랜드화

브라질 리우의 삼바축제, 스페인 부놀의 토마토 축제, 충청남도 보령시의 머드 축제...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2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는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서울시가 '축제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자치구와 민간단체의 축제 자원을

발굴, 관광브랜드로 육성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 축제위원회'는 오는 3월 자치구와 민간 축제 중 발전 가능성이 높은 행사를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선정한다. 민간 축제 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축제도시를 문화행사로 상징되는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축제가 시민 삶에 자리잡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페스티벌 지원 시스템을 갖춘 도시를 뜻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 7기 공약을 통해 "서울의 축제를 시기·주제별로 유형화해 관광상품으로의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충남 보령시의 머드축제 처럼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축제를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지역 경쟁력을 키운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축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서울시의 축제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 '축제도시 서울 만들기 기본계획'을 내놨다.

계획안은 ▲서울시 추진 축제 전문기관으로 이양 ▲민간축제에 대한 간접지원 체계 구축 ▲축제 지원·육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 개최 우수축제 선정·유형화를 통해 관광 자원화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축제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민간단체로 이양한다. 전문가들은 "관 주도의 축제정책에서 탈피하고 지원 중심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직접 예산지원보다는 통합 마케팅, 컨설팅과 같은 간접지원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시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축제 개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와 같이 축제 개최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중간지원 조직을 신설한다.

또 투자출연기관에서 축제를 분산해 개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클래식 축제는 서울시향에서, K-POP 축제는 관광재단에서, 타악 축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하도록 한다.

시는 민간축제 지원을 우선으로 하

되, 재정적 지원보다는 행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계획을 추진한다. 축제 컨설팅, 코칭스쿨 등 축제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문화행사 연구·조사 및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는 축제 연구실(LAB)을 운영한다. 축제 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외 도시와 축제 교류 등 공조 프로젝트를 기획해 실행한다.

시는 민간축제 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과 시의회 협의 등을 거쳐 9월까지 조례 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축제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해진 시기에 특정 구역에서 하는 이벤트에 대해 주류 판매 허용 등 규제를 풀어주는 '축제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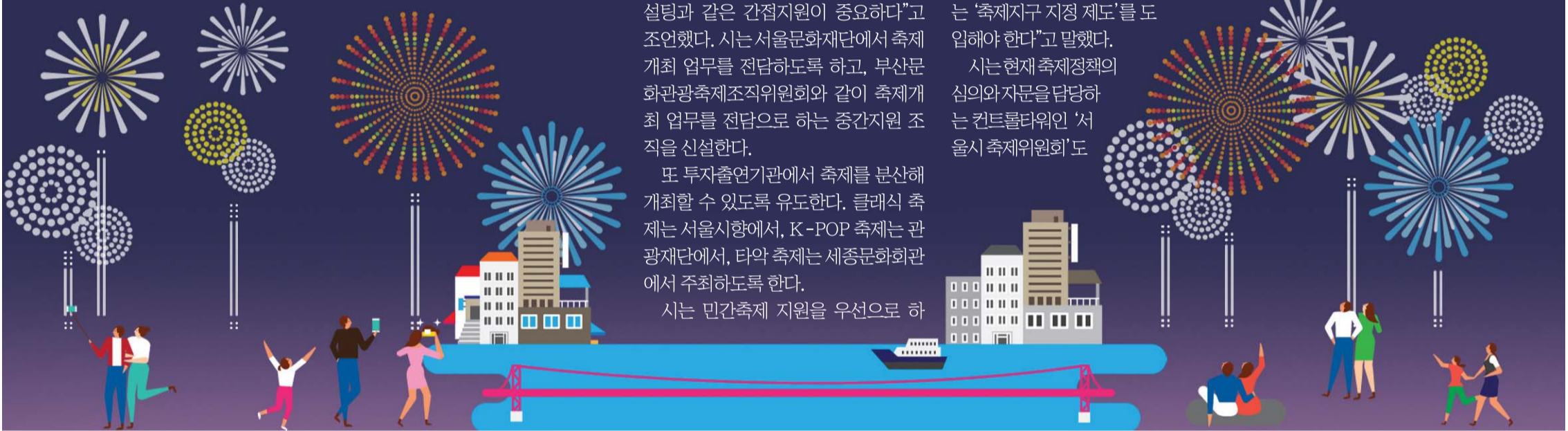
시는 현재 축제정책의 심의와 자문을 담당하는 컨트론타워인 '서울시 축제위원회'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는 축제정책의 수립·변경, 자치구 및 민간 축제의 육성 방향 등을 결정한다.

시는 내달 중 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의 대표축제를 선정한다. 개최시기·장소·파급효과·축제성과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예컨대 계절별 대표축제로 봄에는 중랑구 장미축제, 여름에는 서대문구 신촌 물총축제, 가을에는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겨울에는 서울 빙초롱축제를 선정하는 식이다.

시는 "계절별 대표축제를 선정해 이를 브랜드화하겠다"며 "우수축제의 개최시기를 정례화해 지역·시기별로 맴돌는 축제캐린더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3·1절,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린다 성수·미아·망우... 동북권 거점지역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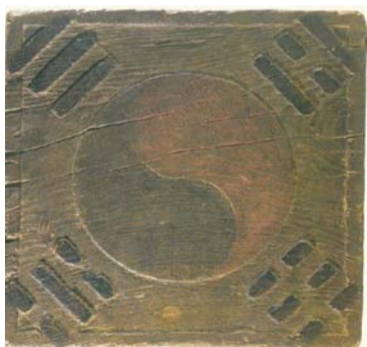
경기도, 대규모 기념사업 추진

경기도가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각 시·군과 함께 기념·지역, 성찰·발전, 포용·미래 3개 분야로 나눠 10여개 기념사업 및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념·지역 분야 사업은 ▲시군과 함께하는 100주년 기념사업 ▲경기도박물관 독립운동가 특별전시 ▲100주년 기념 문화공연 ▲항일운동 문화유산조사 및 항일유적 안내관 등 설치 ▲3.1운동 100주년 기념 민속경기 ▲경기도 3.1운동 기념 웹모바일 동영상 제작 등 6가지다.

이 중 시·군과 함께하는 100주년 기념사업은 시군이 추진 중인 기념사업에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진행해 최근 21개 시군 29개 사업을 선정



경기도박물관 특별전시(태극기모각판) /경기도

했다. 지원대상은 ▲남양주시 독립운동가 이석영, 파주시 임명애, 여주시 조성환 등 지역 독립운동가를 콘텐츠로 한 뮤지컬 제작 ▲일제강점기 군수기지(고양시, 현재 30사단 위치), 좌전고개(용인시), 제암리(화성시), 원곡·양성면, 죽산 일대 만세운동지(안성시) 등 항일유적지에서 펼쳐지는 문화행사 등으로 총 20억 원의 도비가 지원된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경기도·김포시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특별단속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3월 22일까지 김포시와 합동으로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조원지리, 가현리' 일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 특별단속은 지난 11일 KBS 2TV 프로그램 '제보자들'에서 김포시 거물대리 일대 주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 피해를 입

고 있으며, 일부 공장이 오 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등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데 따른 조치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 공무원 및 민간환경감시원 등으로 4개 단속반을 편성, 거물대리 일원에 위치한 238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조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 서울시 '동북권 지역중심 육성방안' SOC 공급방안 발굴·투자계획 수립

서울시는 '동북권 지역중심 육성방안' 수립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동북권 거점지역은 성수, 미아, 망우 일대다. 동북권 지역중심 육성방안은 시가 지난해 3월 발표한 '2030 서울생활권 계획'의 실행 계획에 해당한다.

서울생활권계획은 서울을 5개 권역(동북, 서북, 서남, 동남, 도심)으로 나눠 중심지별 특화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과 권역 자원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공급 방안을 발굴,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3월 5일부터 7일까지 '동북권 지역 중심 육성방안'을 수립

할 업체를 모집한다. 희망 업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제까지 서울시 차원에서 도심 및 광역중심 위주로 큰 밑그림을 그렸다면 이번에는 지역중심지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지역밀착형 육성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방치된 빈집 되살려 청년·신혼부부에 공급

서울시,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서울시가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서울시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16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시가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역에 필요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만들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이다.

시는 지난해 강북 일대를 중심으로 빈집 발굴 작업에 돌입해 14채를 사들였다. 마중물 사업으로 이중 강북구 미아동 소재 빈집 3채에 대한 재생사업을 실시한



종로구 충신4길 일대 빈집 모습. /서울시

다. 빈집의 노후·불량 상태 조사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채는 신축 후 청년주택으로 1채는 리모델링 후 청년거점시설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공공건축가와 시민출자 청년주택인 '터무니 있는 집'의 입주 청년들이 협업한다. 청년과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현정 기자

## 당산역 일대 개발 가속화 서울시, 지구단위구역 확대

서울 지하철 2·9호선이 지나는 당산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넓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산역 일대는 2030 서울플랜에서 지구중심으로 중심지 위계가 상향된 곳이다. 중심기능 육성과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금반 재정비로 당산역 동측에 위치한 준공업지역 1만2387㎡이 해당 구역에 추가 편입됐다. 시는 도로변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체계를 현행 기준에 맞춰 변경하고, 획지선 계획을 폐지해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